

#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출발부터 '암초'

### 강원도 정치권·시민단체들 '생존권 문제' 내세우며 개정안 발의 취소 강력 요구... 좌초 우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군산)이 발의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향후 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등이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 카지노 추가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인 만큼 당정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을 조기개발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합 카지노 리조트 도입이 반대 움직임에 좌초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에 복합 리조트가

들어서면 23만개의 일자리를 비롯해 연간 관광객 2,000만명 등이 찾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국제공항건설, 동서횡단철도 등 새만금 핵심시설이 뒤따르면서 새만금 성장동력 확보 등 새로운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내국인 카지노 허용 개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45명 등 적잖은 의원들이 찬성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강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설립 취지가 있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소

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이번주 국민의당 강원도당 창당이 예정된 가운데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는 등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2일 김영식 태백시장과 태백지역 104개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김관영 의원실을 향의 방문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뿐만 아니라 공식 성명을 통해 중앙당과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들과 접촉에 나서 "생존권 문제"를 내세우며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강원도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내국인 카지노 추가 설립 불가 주민 여론

을 결집, 개정안 통과에 대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가 한 관계자는 "강원도가 지역 생존권을 들고 일어나면서 개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내국인 카지노 독점이나 등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카지노 설립 시동을 걸 수 있을 지 두고 불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 특별법 63조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를 바꿔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신광영 기자

### 추경처리 불발... 추가 협상도 난항

여야가 22일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청와대 서별관 청문회 증인체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추경 처리가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추경 처리와 청문회 개최 일정을 잡기 위한 추가 실무협상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추경안을 먼저 처리하고 추후 청문회를 열기로 한 원내대표간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서별관 청문회에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KDB산업은행장 등 핵심 증인을 출석시켜야 추경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사드 배치 협조 위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를 방문해 새누리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한 장관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국민의당은 증인 체택에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청문회 형식 역시 정부 위-기재위 연석회의 방식으로 열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이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날 오전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원실에서 열린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에서도 청문회 증인체택은 불발됐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을 제외하면 홍기택·김민수 전 행장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체택은 필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협상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홍기택 증인은 어디있는지도 잘 모른다"고 하더라. 안 수석은 청와대가 내놓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며 "최경환 전 부총리가 나와서 결자해지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했더니 본인 안 나온다고 해서 얘기도 못 꺼낸 것 같더라"라고 협상 내용을 소개했다.

더민주 측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위-기재위 연석청문회 방식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 친박도 '우병우 퇴진 촉구' 주장 표명

### 정진석·정우택·정갑윤·김도읍 퇴진해야... 이정현·조원진·이장우·김진태 반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로 친박계와 비박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 내부에서도 우병우 퇴진론에 가세하는 인사들이 늘어나는 등 친박계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친박 중진 정우택 의원은 22일 라디오에 출연, "일반적 시각으로 봤을 때 당연히 검찰의 조사를 넘어갔기 때문에 현직 민정수석의 입장에서 거취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우 수석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18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 수석의 퇴진을 공개 요구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은 정부 사정기관 지휘 책임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 공직자 검증, 국민 여론 동향 파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가 제기된 상황에서 직책을 계속하는 것은 법리상 국민정서상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가 사실상 우

수석 경질은 없다는 입장 발표 이후에도 "감찰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건 그거대로 다루는 것"이라며 "우 수석의 입장은 지금 부자연스럽고 또 정부에도 부담이 되지만 한 것이 없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우 수석과 면담을 해 '저는 정말 이런 저런 뉘 비리 한 것이 없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우 수석 경질 반대를 강조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우선 특별감찰관제도의 기본적 법적 내용을 좀 봐야 한다"며 "정중점 의원이 의총에서 말하길, 이견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장우 최고위원도 전날 뉴스와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사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스

반면 강성 친박들은 여전히 우 수석 퇴진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정현 대표는 6일째 우 수석 거취 관련 논란에 침묵하며 청와대 입장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 강성 친박의 대표 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 우 수석에 대해 "정권 흔들기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우 수석과 면담을 해 '저는 정말 이런 저런 뉘 비리 한 것이 없습니까'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그래도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정도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우 수석 경질 반대를 강조했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우선 특별감찰관제도의 기본적 법적 내용을 좀 봐야 한다"며 "정중점 의원이 의총에서 말하길, 이견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고, 이장우 최고위원도 전날 뉴스와 통화에서 "사실 관계를 규명하는 게 먼저"라며 사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스

### 추미에 '김종인, 세상 모르고 헛소리 한다?' 격정마시길

추미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세상 변하는 것 모르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라고 당내 추류를 직격탄 데 대해, "크게 김 대표가 격정 안해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또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해 "부패 비리의 의혹이 깊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물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저도 가끔씩 당내 이전투구에 빠지지 않고 당원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강한 야당을 만들고,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제시해 신뢰받는 당으로 거듭나자는 강조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후보는 그러면서 "김 대표는 선거 과정에 당을 맡아 고생을 하였고,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강연도 하셨다"며 "우리 당 외연확장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대부분의 당원들도 그런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는 또 시도당위원장 선거 결과, 주류 일색이 된 정당에서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에 "권역별 시도당 대회가 있었고 아직 부분별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예단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추 후보는 이어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감찰내용이 유출된 데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한 것과 관련, "비리의 몸통이 노출될까봐 결다리를 걸고있는 셈 아니냐"고 꼬집었다. /뉴스

## 박주현 의원,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폐지법안 대표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산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경우 세금의 10%를 공제해준다. 이 제도는 1982년에 도입된 것으로 과거 행정적 한계로 납세자들의 상속·증여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었을 때 납세자 자진 신고를 유도하고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박 의원은 "최근에는 국세청의 세원파악 역량 확대 및 시스템 확충으로 공제 제도의 필요성이 낮아진데다, 현행법상 신고불

성실 가산세가 20~40%에 달해 굳이 신고세액공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성실 신고를 충분히 유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세액공제는 2011년 폐지되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대상을 축소하는 등 의무를 장려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처할 공제한도도 없이 10%에 이르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은 과액 상속 및 증여에 대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이며, "세무사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자는 신고를 놓칠 가능성이 적으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의 경우 신고기간을 놓치게 되면

20~40%의 가산세뿐 아니라 10% 세액공제도 못 받게 되어 소득 역진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세액공제폐지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신고세액공제 실적은 상속세가 2,345억원이고 증여세가 2,485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폐지한다면 향후 (2015년 기준) 연간 4,830억원의 세수가 증가되어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박주현 의원은 의정활동의 최우선 과제를 양극화 해소에 두고 있으며,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양극화 해소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문성훈 기자

### "한국부자들, 예외적 대접 받으려 해" 김종인, "경제민주화, 정치지도자 신념 필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2일 재벌 총수들에게 "우리나라에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하는가. 나는 좀 예외적인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사고다. 그것에 불만을 느끼면 사람을 당황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주요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조찬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가 독일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랬다. 나를 찾아올 필요가 없다. 나라가 정한 룰을 지키면 되지 룰을 위반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룰을 안 지키려면 그 룰이 없어져야 한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에 동의할 수 없으니 절대로 그런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위협적인 언사, 어떤 때는 회유적인 언사가 있었다"면서 "이렇게 해서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공정한 룰이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에게 말로 이야기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다 잘 되는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냐고 말하는데 정치가 사회 전반의 조화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래서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제효율을 제대로 발휘하고 안정을 유지하려면 지도자의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제도적인 장치를 완벽하게 해도 그것을 실천할 의지가 없으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쪽은 특정한 제도가 들어와 나에게 불편할지 모르고 재벌개혁이고 재벌해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며 "규율을 제대로 확립해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다. 누구든 예외를 인정받아 나는 다른 사람"이라는 이런 풍토를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러분의 우려대로 경제민주화로 경제인을 옥죄려는 뜻은 나는 생각한 적이 없다"며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할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것이다. 더이상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른 오해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

### 정 의장 "대북 압박정책, 결과가 뭐냐"

정세균 국회의장은 22일 "대북 압박정책으로 일관해 온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의 결과가 뭐냐"고 보수정권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 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체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체제만으로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 정권 붕괴론을 신봉하는 분도 있지만 북한 체제의 지탱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백만의 아사자를 냈던 북한 체제가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서도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텨왔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체제 일반론의 정책으로 인해 자칫金正은 정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불행한 사태는 결코 없어야 한다. 대화와 제재가 병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의 조속한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했다.

그는 "추석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생존해 계신 이산가족 분들이 고통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길이 없다"라며 "정부가 당장 대화의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스

###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자진 사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2일 과거 음주운전 사고 전력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광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것은 물론이고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했던 전력이 드러나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본인의 지난 삶을 결단히 반성했다면 경찰의 수장이 되겠다는 헛꿈은 꾸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경찰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내정자 신분에서 물러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안전행정부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역시 개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이 후보자는 음주운전 뿐 아니라 경찰 신분을 감추기 위해 허위진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청장으로서가 아니라 경찰로서도 결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과거의 잘못을 책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정책과 국민감동 사이에서 경찰공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